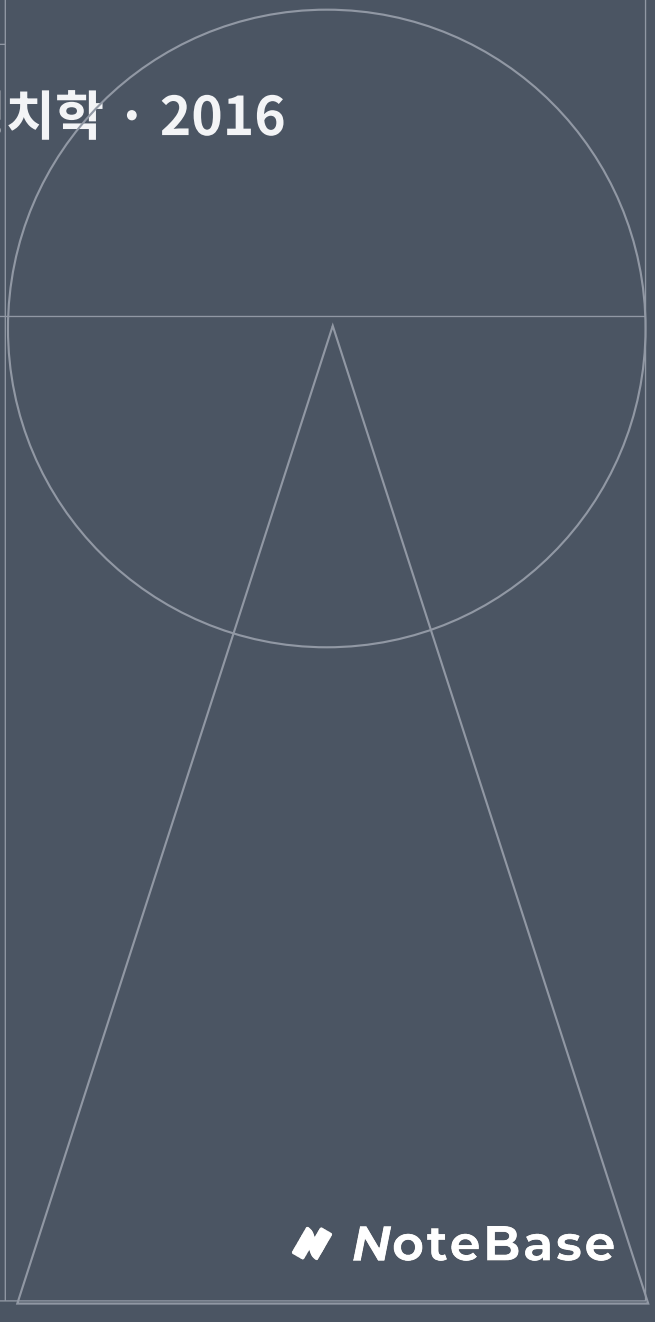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6

문 1.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사 임명

② 전쟁 선포

③ 전쟁 지휘

④ 조약 협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의 권력분립 구조에서 대통령의 외교·군사 권한과 의회의 헌법상 권한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사 임명, 군 통수, 조약 협상 같은 집행·외교 기능을 담당한다.
미국 의회는 입법부로서 전쟁 선포와 조약 비준 동의처럼 국가의 중대한 대외결정을 통제한다.
따라서 '전쟁을 지휘하는 권한'과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은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대사를 지명·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상원의 동의가 결합되는 구조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전쟁 선포'이다. 실제로는 전쟁 선포권이 의회에 있다.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지만, 전쟁 자체를 선포하는 기관은 의회이다.
③ O: 전쟁 지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미국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O: 조약 협상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조약의 최종 성립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협상권과 비준권을 구별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모두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 쉽게 섞인다. 출제자는 '전쟁 선포'와 '전쟁 지휘'를 분리해 두었다는 점을 노린다. ④도 조약 '협상'과 조약 '비준'을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국 대통령 권한 문제가 나오면 '임명·지휘·협상'은 대통령, '선포·비준'은 의회 또는 상원의 통제 영역이라고 나누어 판단한다. 전쟁은 선포와 지휘를, 조약은 협상과 비준을 분리해서 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미국 대통령은 임명·지휘·협상, 의회는 선포·비준이다.

NoteBase

문 2. 유럽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는 1958년 창설되었으며 창립회원국은 벨기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다.

②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진행된다.

③ 2013년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28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④ 유로화는 현재 영국,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럽연합의 전신, 기본 입법절차, 회원국 확대, 유로화 사용 범위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럽경제공동체(EEC)는 로마조약에 의해 성립해 1958년에 출범한 유럽연합의 전신이다.
일반입법절차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공동으로 입법하는 기본 절차이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가입으로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유로화 사용국과 EU 회원국은 일치하지 않으며, 출제 당시인 2016년 기준 유로존은 19개국이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럽경제공동체는 1958년에 출범하였고, 창립 회원국도
벨기에·서독·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가 맞다.

② O
일반입법절차는 EU의 가장 기본적인 입법절차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공동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③ O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 EU에 가입하였고, 이로써 회원국 수는 28개가 되었다.

④ X
틀린 부분은 '영국,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라는 표현이다. 출제 당시인 2016년 기준 유로화를 쓰지 않은 회원국은 영국 외에도
덴마크·스웨덴·폴란드·체코·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가 있었다. 올바르게는 '유로화는 모든 EU 회원국이 아니라 유로존에 속한 회원국에서 사용되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EU 회원국 수와 유로화 사용국 수를 같은 것으로 보면 ④에 속기 쉽다. 유럽연합 가입과 유로존 가입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U 관련 선지는 회원국 여부, 유로존 여부, 입법절차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판단하면 된다. 특히 '모든 회원국' 같은 전면적 표현이 나오면 예외국 존재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암기 포인트

2016년 기준 EU는 28개국, 유로존은 19개국이므로 EU 회원국과 유로화 사용국은 같지 않다.

NoteBase

문 3.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계에서 세력불균형이 심화될수록 불안정성은 증대된다.

② 국가는 자강(自强), 또는 동맹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③ 국가는 일반적으로 최강자의 힘에 편승한다.

④ 제1차 세계대전은 과다동맹, 제2차 세계대전은 과소동맹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력균형과 편승의 차이, 그리고 세력균형이 작동하는 기본 방식과 동맹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세력균형은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들이 자강이나 동맹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논리이다. 키워드는 견제와 균형이다.
편승은 약한 국가가 위협적인 강대국에 맞서기보다 그 강대국 쪽에 붙어 이익이나 안전을 얻으려는 선택이다. 키워드는 최강자 추종이다.
과다동맹은 동맹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확대되어 분쟁이 쉽게 확전되는 상태이고, 과소동맹은 침략국을 막을 만큼 충분한 연합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체제의 힘이 크게 한쪽으로 기울수록 패권 추구와 반작용이 커져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세력불균형의 심화는 균형 필요성을 키운다.
② O: 세력균형은 내부적으로는 자강, 외부적으로는 동맹을 통해 형성된다. 자력 증강과 연합 형성은 대표적인 균형 수단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최강자의 힘에 편승한다"이다. 세력균형이론의 기본 예상은 일반적 편승이 아니라 최강자에 대한 균형 형성이다. 올바르게는 국가는 대체로 최강자에 편승하기보다 그 힘을 견제하려고 자강하거나 동맹을 맺는다.
④ O: 제1차 세계대전은 과도하게 얽힌 동맹망이 위기를 확전시킨 과다동맹의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을 제어할 만큼 충분한 연합이 늦게 형성된 과소동맹의 사례로 설명된다.

오답 포인트

세력균형과 편승을 반대로 외우면 ③에 쉽게 넘어간다. 현실주의에서 편승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력균형이론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예상하는지를 묻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세력균형이론이 나오면 먼저 최강자를 견제하는지, 최강자에게 붙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견제와 균형이면 세력균형, 최강자 추종이면 편승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세력균형은 강자 견제, 편승은 강자 추종이다.

NoteBase

문 4.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②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세르비아 편에, 독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편에 가담했다.

③ 이탈리아는 전쟁 초기에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편에 가담했다가 전쟁 후기에 중립을 선언했다.

④ 전쟁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계기, 참전 진영, 이탈리아의 참전 경과, 전후 처리 조약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을 직접 계기로 발발한 전쟁이며, 처음에는 협상국과 동맹국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었다.
이탈리아는 전쟁 발발 직후 동맹국 편에서 곧바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중립을 선언했고, 이후 1915년 협상국 측에 가담하였다.
전쟁의 대표적 종결 조약으로는 독일과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피살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② O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세르비아를 지원하는 협상국 측에 섰고, 독일은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지원하였다. 선지의 진영 구분은 큰 흐름에서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전쟁 초기에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편에 가담했다가 전쟁 후기에 중립을 선언했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전쟁 초기에 이탈리아가 중립을 선언하였고, 이후 1915년에 협상국 편으로 참전하였다. 전쟁 초기 참전과 중립 선언의 시간관계가 뒤집혀 있다.

④ O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약은 독일과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이다. 시험에서는 이를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조약으로 묻는 경우가 많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이탈리아가 원래 삼국동맹의 일원이었던 사실과 실제 전쟁 개시 후의 행동을 혼동하게 만든다. 동맹 소속과 실제 참전 진영은 같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문항은 그 지점을 뒤집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1차 세계대전 문제는 먼저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 뒤, 사라예보 사건, 협상국 대 동맹국 구도, 이탈리아의 초기 중립과 이후 협상국 참전,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핵심 사실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이탈리아는 삼국동맹 출신이지만 1914년 중립, 1915년 협상국 참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냉전 형성기에 미국이 주도한 외교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마샬 계획
ㄴ. 봉쇄 정책
ㄷ. 베를린 봉쇄
ㄹ. 애치슨 선언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냉전 형성기에 등장한 주요 사건과 정책 가운데 미국이 주도한 대소 외교정책과 소련이 취한 조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셜 계획: 미국이 서유럽의 경제 부흥을 지원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 한 원조 정책이다. 키워드는 경제원조와 서유럽 재건이다.
봉쇄 정책: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기본 대외전략이다. 키워드는 소련 팽창 억제이다.
베를린 봉쇄: 1948년 소련이 서베를린에 대한 육상 접근을 차단한 조치이다. 키워드는 소련의 차단 조치이다.
애치슨 선언: 1950년 미국이 극동 방위선 인식을 밝힌 선언이다. 키워드는 미국의 방위선 선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①은 ㄱ, ㄴ만 묶었으므로 맞는 항목인 ㄹ이 빠져 있다. 애치슨 선언은 미국이 발표한 대외정책적 선언이므로 냉전 형성기 미국 주도 외교정책 범주에 들어간다. 틀린 표현은 'ㄱ, ㄴ'이라는 조합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ㄹ'이다.
② O: ㄱ 마셜 계획, ㄴ 봉쇄 정책, ㄹ 애치슨 선언은 모두 미국이 주도한 정책 또는 선언이다. 마셜 계획은 경제 원조를 통한 대소 봉쇄의 한 축이고, 봉쇄 정책은 냉전 초기 미국의 기본 전략이며, 애치슨 선언도 미국의 극동 전략 인식을 보여 준다.
③ X: ③은 ㄷ 베를린 봉쇄를 포함하므로 틀리다. 베를린 봉쇄는 미국 정책이 아니라 소련이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틀린 표현은 'ㄷ 포함'이며, 올바르게는 'ㄷ을 제외한 ㄱ, ㄴ, ㄹ'이다.
④ X: ④도 ㄷ 베를린 봉쇄를 포함하므로 틀리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대표 정책인 ㄱ 마셜 계획이 빠져 있어 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ㄴ, ㄷ, ㄹ'이라는 조합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ㄷ 베를린 봉쇄를 베를린 공수작전과 혼동하면 미국 정책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은 '미국이 주도한 정책'을 묻는데, 베를린 봉쇄는 소련의 봉쇄 조치이고 미국의 대응은 공수작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냉전 초기 사건을 보면 먼저 누가 행동 주체인지부터 가른다. 경제원조, 봉쇄전략, 방위선 선언처럼 미국이 제시한 정책은 미국 쪽에 넣고, 베를린 봉쇄처럼 소련이 서방을 압박한 사건은 제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마셜 계획, 봉쇄 정책, 애치슨 선언은 미국이고, 베를린 봉쇄는 소련이다.

NoteBase

문 6.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화폐를 확보하려고 할 때

② 달러나 파운드화처럼 대외거래를 직접 결제할 때

③ 다른 국가가 보유한 자국 화폐를 회수할 때

④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SDR이 통화가 아니라 IMF가 만든 국제준비자산이며, 외화 확보·공식거래·IMF에 대한 의무 이행에는 쓰일 수 있지만 민간의 대외거래를 달러처럼 직접 결제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DR은 IMF가 창설한 국제준비자산이다. 결정 차이축은 '직접 결제용 통화인가, 공식보유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준비자산인가'이다. SDR은 자유사용통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이므로 필요할 때 외화로 바꾸어 쓴다.
자유사용통화는 달러나 파운드처럼 실제 대외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직접 쓰이는 통화이다. 따라서 SDR과 자유사용통화를 같은 결제수단으로 보면 오답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화폐를 확보하려 할 때 SDR을 사용할 수 있다. SDR의 기본 기능이 회원국이 필요할 때 자유사용통화로 교환하여 외환 유동성을 보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달러나 파운드화처럼 대외거래를 직접 결제'이다. SDR은 통화 자체가 아니라 국제준비자산이므로 수출입 대금을 달러처럼 바로 지급하는 직접 결제수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SDR을 다른 회원국과의 거래를 통해 자유사용통화로 바꾼 뒤 그 통화로 대외거래를 결제한다.

③ O
다른 국가가 보유한 자국 화폐를 회수할 때도 SDR을 사용할 수 있다. SDR은 회원국 사이의 공식거래에서 다른 참가국이 보유한 자국 통화 잔액을 되사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④ O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때도 SDR을 사용할 수 있다. SDR은 IMF에 대한 금융상 의무, 즉 차입금 상환이나 관련 부담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달러나 파운드화처럼'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SDR은 가치가 주요 통화 바스켓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 자체가 달러나 파운드처럼 시장에서 직접 물건값이나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통화는 아니다. '가치 기준이 통화 바스켓이다'와 '통화처럼 직접 결제한다'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공식준비자산의 용도를 묻는지, 민간의 직접 결제수단을 묻는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외화 확보, 회원국 간 공식거래, IMF에 대한 의무 상환이면 SDR 사용 가능 쪽이고, 달러처럼 민간 대외거래를 직접 치른다는 표현이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SDR은 통화가 아니라 준비자산이다. 외화로 바꾸어 쓰고, IMF 의무 이행에는 쓸 수 있지만, 무역대금을 달러처럼 직접 결제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7.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 원칙

②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

③ 상설안보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원칙

④ 힘에 의한 위협 또는 힘의 사용 포기 원칙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SEAN의 이른바 ASEAN Way가 어떤 원칙들로 구성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SEAN Way는 동남아 국가들이 대외관계와 역내 협력에서 비공식 협의, 합의, 불간섭, 주권 존중, 무력사용 자제를 중시하는 외교 방식이다.
상설안보기구 중심의 강한 집단안보 체제와는 성격이 다르며, 분쟁도 강제적 안보기구보다 협의와 평화적 해결 원칙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은 ASEAN 협력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주권국가의 자율성과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ASEAN Way와 맞다.

② O
상호내정 불간섭은 ASEAN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원칙이다. 회원국 내부 문제에 대한 공개적 개입을 자제하는 태도가 ASEAN Way의 핵심 요소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설안보기구를 통한"이다. ASEAN의 분쟁관리는 NATO식 상설안보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 합의, 비공식 외교,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O
힘에 의한 위협 또는 힘의 사용 포기는 ASEAN의 기본 외교 원칙과 부합한다. 무력충돌보다 자제와 평화적 공존을 중시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분쟁관리"라는 말 자체는 맞는 방향처럼 보이지만, 앞에 붙은 "상설안보기구"가 ASEAN의 성격과 어긋난다. ASEAN은 제도화된 집단안보체제보다 느슨한 합의와 비공식 조정을 중시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SEAN 관련 선지는 먼저 강한 제도화·강제성·집단안보 방식인지, 아니면 주권 존중·불간섭·합의 중심 방식인지를 가르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전자이면 ASEAN보다는 부적합하고, 후자이면 대체로 ASEAN Way와 맞는다.

암기 포인트

ASEAN Way는 불간섭·합의·주권존중이고, 상설안보기구식 집단안보는 아니다.

NoteBase

문 8. 전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는 현재 상태(status quo)를 준거점으로 삼는다.

② 정책결정자는 새로운 이익을 위해 모험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만족한다.

③ 정책결정자는 손실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위험회피의 성향을 보인다.

④ 정책결정의 비합리적, 탈균형적, 비일관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망이론의 기준점, 손실회피, 이득 영역과 손실 영역에서의 위험선호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망이론은 사람들이 절대적 결과보다 기준점 대비 이득과 손실을 중심으로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기준점은 대체로 현재 상태(status quo)이며,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추구가 나타나기 쉽다.
핵심 키워드는 기준점, 손실회피, 이득에서는 안전선호, 손실에서는 모험선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현재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전망이론의 기본 전제와 맞다. 사람들은 변화의 절대 크기보다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얻고 잃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O
전망이론은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현재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경향을 설명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추가 이익을 노리기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선택이 자주 나타난다.

③ X
틀린 부분은 "손실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위험회피의 성향"이라는 표현이다. 전망이론에서는 손실 영역에서 확실한 손실을 피하려고 오히려 위험추구 성향이 나타나기 쉽다. 올바르게는 "손실과 관련된 결정에서는 위험추구 성향이 나타나기 쉽다"이다.

④ O
전망이론은 기대효용이론처럼 항상 일관되고 합리적인 선택만을 전제하지 않는다. 실제 정책결정의 비합리적, 탈균형적, 비일관적 측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손실이 싫으니 손실 상황에서는 더 조심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③을 맞는 설명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전망이론은 손실이 확정되는 것을 더 싫어해 손실 영역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을 감수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망이론 문제는 먼저 기준점이 현재 상태인지 확인한 뒤, 선택 상황이 이득 영역인지 손실 영역인지 구분하면 된다. 이득이면 위험회피, 손실이면 위험추구로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전망이론은 현재 상태를 기준점으로 보고, 이득에서는 안전을 선호하고 손실에서는 모험을 감수하기 쉽다.

NoteBase

문 9.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된 존스법(Jone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운송은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미국의 조선·해운산업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③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군사용 선박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④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존스법의 연안운송 보호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미국 내 해상 운송을 미국 선박과 미국인 선원 중심으로 보호하는 카보타주 원칙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존스법 = 미국 내 두 지점 사이의 해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미국 건조·미국 소유·미국 등록 선박에 맡기도록 한 연안운송 보호 제도이다.
카보타주 = 한 나라의 국내 연안운송을 자국 선박에 우선적으로 유보하는 원칙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미국 내 두 지점 사이의 승객·화물 운송은 미국 건조, 미국 소유, 미국 등록 요건을 갖춘 선박이 담당한다. 또한 미국 국적 선박에는 선장·장교와 상당수 선원에 대한 미국 시민 요건이 작동한다.
함정은 '선원의 국적이나 선박 수리 장소는 제한이 없다'는 식의 무제한 표현이다. 적어도 선원 국적은 제한되고, 선박도 해외 재건조가 이루어지면 연안운송 자격이 제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존스법의 핵심은 미국 내 두 지점 사이의 연안운송을 미국 쪽 요건을 갖춘 선박에 맡기는 데 있다. 승객과 화물 모두 미국 연안운송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옳다.

② O
-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되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상선대, 조선업, 해운업, 미국인 선원 일자리를 유지·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전후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 논리가 함께 반영되어 있으므로 옳다.

③ O
- 이 법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국가안보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전쟁이나 국가비상 시 군사 수송에 활용할 수 있는 상선대와 해기사 기반을 유지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옳다.

④ X
-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미국 국적 선박에는 선장·장교와 선원의 국적 요건이 작동하고, 선박도 해외 재건조가 이루어지면 연안운송 자격이 제한된다.
- 틀린 표현: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 올바른 표현: '선원의 국적은 제한되며, 선박도 미국 건조·미국 등록 요건과 해외 재건조 제한 등 연안운송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선박의 국적만 맞으면 나머지 요건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존스법은 단순한 국기 요건이 아니라 건조지, 소유, 등록, 선원 구성까지 묶어 미국 해운 기반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안운송 보호법 문제가 나오면 먼저 운송 구간이 미국 내 두 지점 사이인지 본다. 그다음 건조지, 소유, 등록, 선원 요건 가운데 무엇을 묻는지 확인하면 '제한이 없다'는 선지는 대부분 오답 후보가 된다.

암기 포인트

존스법은 미국 연안운송의 카보타주 법이며, 핵심 키워드는 미국 건조, 미국 소유, 미국 등록, 미국인 선원, 국가안보이다.

NoteBase

문 10. 생 피에르(Saint Pierre)의 평화구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의 영구평화를 위해 국제연맹, 국제재판소 설치를 제창하였다.

② 평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③ 군주의 선의에 입각한 단결을 통해 국제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④ 평화를 위한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제안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 피에르의 영구평화 구상에서 핵심 키워드인 유럽 연합기구, 상설적 분쟁해결 장치, 군주 간 조약, 평화 우선성을 정확히 연결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생 피에르: 유럽의 영구평화를 위해 국가들이 연합체를 만들고 공동기구와 재판적 분쟁해결 장치를 두어 전쟁을 억제하려 한 사상가이다.
생 피에르의 평화구상: 개별 군주의 선의와 합리적 이해를 제도화된 조약과 연합체로 묶어 평화를 지속시키려는 구상이다.
구별 포인트: 공화정을 평화의 핵심 정치체제로 전면화한 인물은 칸트에 가깝고, 생 피에르는 군주국 질서를 전제로 평화연합을 설계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 피에르는 유럽 국가들의 연합기구와 상설적 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전쟁을 막고자 했다. 선지의 국제연맹, 국제재판소는 후대 용어에 가까우나, 그 취지는 생 피에르의 유럽 평화연합 구상과 부합한다.
② O. 생 피에르의 평화구상은 전쟁의 영광보다 평화의 지속을 더 높은 정치적 가치로 본다. 따라서 평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서술은 맞다.
③ O. 생 피에르는 군주들이 합리적 이해와 선의에 입각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면 국제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군주의 선의에 입각한 단결과 조약이라는 방향은 맞다.
④ X. 틀린 표현은 "공화제"이다. 생 피에르는 군주제를 전제로 국가 간 연합과 조약 준수로 평화를 구상했다. 올바르게는 "평화를 위한 정치체제로 군주국들 사이의 연합체와 상설적 분쟁해결 제도를 구상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생 피에르의 평화연합론과 칸트의 공화정 평화론을 섞는 데 있다. 평화사상 문제에서 연합기구, 상설재판, 군주 간 조약은 생 피에르 쪽이고, 공화정은 칸트 쪽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상가 매칭 문제에서는 먼저 인물 이름을 대표 키워드에 연결해 판단한다. 생 피에르가 보이면 유럽 연합, 상설적 재판·중재, 군주 간 조약을 떠올리고, 공화정이 나오면 칸트와의 연결 가능성을 먼저 본다.

암기 포인트

생 피에르는 군주국들의 평화연합을, 칸트는 공화정을 평화조건으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11. 유럽 각국이 공동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은?

① 마스트리히트조약

② 니스조약

③ 셍겐조약

④ 리스본조약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럽 통합 관련 주요 조약 가운데 국경 통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기능을 담당한 조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연합의 출범과 경제·통화통합의 틀을 만든 조약이다.
니스조약은 동유럽 확대에 대비한 EU 기구 개편과 의사결정 규칙 조정을 다룬 조약이다.
셍겐조약은 참여국 사이의 내부 국경 통제를 없애 자유로운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대신 외부 국경 관리와 비자 협력을 강화한 체제이다.
리스본조약은 EU의 법인격과 제도 운영을 정비한 개혁조약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마스트리히트조약은 EU 출범, 유럽시민권, 경제·통화동맹의 기반을 마련한 조약이므로 국가 간 출입국 통제 철폐를 직접 내용으로 한 조약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통행 제한이 없게 한 조약'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연합의 제도적 틀을 만든 조약'이다.

② X
니스조약은 EU 확대에 맞춘 표결 방식과 기구 개편이 핵심이므로 자유통행 보장 조약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공동 출입국관리정책으로 통행 제한을 없앤 조약'이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니스조약은 확대된 EU의 제도 개혁을 다룬 조약'이다.

③ O
셍겐조약은 참여국 내부 국경에서의 통행 제한을 없애 사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 조약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공통의 외부 국경 관리와 비자 협력도 함께 발전하였다.

④ X
리스본조약은 EU의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체계를 정비한 개혁조약이지, 내부 국경 통제 철폐를 처음 규정한 조약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통행 제한이 없게 한 조약'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리스본조약은 EU의 제도와 운영 원칙을 개혁한 조약'이다.

오답 포인트

EU를 출범시킨 대표 조약인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실제 자유통행을 상징하는 셍겐조약을 혼동하기 쉽다.
출제자는 '유럽 통합'이라는 큰 흐름만 기억한 수험생이 ①로 끌리도록 만든 문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자유통행, 국경 통제 완화, 비자 협력 같은 표현이 나오면 셍겐조약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EU 출범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제도 개혁은 니스조약과 리스본조약으로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셍겐은 국경 없는 이동, 마스트리히트는 EU 출범, 니스·리스본은 제도 개혁이다.

NoteBase

문 12. 중국 시진핑정부가 제안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이익 상호존중

② 윈-윈 협력

③ 불충돌과 불대항

④ 상호불가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3대 핵심 요소와 기존 평화공존 원칙의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이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시한 대국관계 구상으로,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윈윈 협력이 핵심이다.
상호존중은 상대의 사회제도와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뜻이고, 윈윈 협력은 경쟁만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넓히는 협력을 말한다.
상호불가침은 평화공존 5원칙에 들어가는 표현이지 신형대국관계의 대표 구성요소로 제시된 문구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신형대국관계는 상호존중을 핵심으로 하며, 여기에는 상대방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다.
② O : 윈-윈 협력은 신형대국관계의 핵심 문구 중 하나로, 대국 간 갈등관리만이 아니라 공동발전과 협력을 강조한다.
③ O : 불충돌과 불대항은 신형대국관계의 대표 표현으로, 미중 간 정면충돌과 대결구도를 피하자는 뜻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상호불가침'이다. 이는 평화공존 5원칙의 표현이다.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은 상호불가침이 아니라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윈윈 협력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중국 외교의 전통적 표어인 평화공존 5원칙의 문구를 끌어와 신형대국관계의 구성요소처럼 섞어 놓은 함정이다. '중국 외교 담론'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익숙한 표현을 고르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윈윈 협력의 3요소를 떠올리면 된다.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처럼 평화공존 5원칙 계열 표현이 보이면 다른 개념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신형대국관계는 불충돌·상호존중·윈윈 협력, 평화공존 5원칙은 상호불가침까지 포함하는 별도 틀이다.

NoteBase

문 13. 유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엔은 1945년 51개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② 인권보호는 유엔 창설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③ 한국은 1991년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④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지금까지 작동된 적이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엔의 창설 목적, 성립 시기와 회원국 수, 한국의 가입 시점, 집단안보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엔은 1945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우호관계 증진, 인권 존중 촉진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집단안보는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을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보고 공동 대응하는 체제이며, 완전무결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어도 실제로 가동된 사례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엔은 1945년 유엔헌장 발효와 함께 공식 출범했고 원회원국은 51개국이다.

② O
유엔헌장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둔다. 인권보호는 유엔 창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는 설명이 맞다.

③ O
대한민국과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남북한 동시 가입은 분단국이 각각 독립된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례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지금까지 작동된 적이 없다"는 표현이다.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한계와 제약이 컸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과 걸프전처럼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집단적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틀린 표현을 고치면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제한적이지만 작동한 사례가 있다"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집단안보체제가 기대만큼 완전하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로 과장한 선지이다. 국제정치 문제에서는 "항상", "전혀", "한 번도 없다" 같은 절대적 표현이 오답 함정으로 자주 쓰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기구 관련 선지는 연도, 회원국 수, 가입 시점 같은 기본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전혀", "반드시", "항상" 같은 절대 표현이 들어갔는지를 본다.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과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판단이다.

암기 포인트

유엔은 1945년 51개국으로 출범했고, 남북한은 1991년 동시 가입했으며, 집단안보는 제한적으로나마 작동한 적이 있다.

NoteBase

문 14. 신자유제도주의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계에서 제도는 중요하다.

② 상호 이익이라는 전제를 안보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한다.

④ 국가는 절대이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자유제도주의가 국가 이익과 국제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관점이 구성주의와 어디서 갈리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도 제도가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를 가능하게 하며 거래비용을 낮춰 국가 협력을 촉진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핵심 키워드는 제도, 협력, 절대이득이다.
구성주의는 국제규범과 관념이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 자체를 형성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핵심 키워드는 규범, 정체성, 이익의 사회적 구성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 이익을 대체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구성주의는 그 이익이 규범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관계에서 제도는 중요하다는 진술은 신자유제도주의의 핵심 주장에 해당한다. 신자유제도주의는 제도가 협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약속 이행을 점검하게 해 준다고 본다.

② O
상호 이익이라는 전제를 안보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진술도 맞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경제 영역뿐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도 반복적 상호작용과 제도를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X
틀린 부분은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한다"이다. 이는 신자유제도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의 주장이다. 신자유제도주의에서 국가는 이미 일정한 이익을 가진 행위자이며, 제도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돕는 장치로 이해된다. 올바르게는 "국제제도는 주어진 국가 이익의 추구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한다"이다.

④ O
국가는 절대이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진술은 신자유제도주의와 부합한다. 신자유제도주의는 상대가 더 많이 이익을 얻는지보다 자신도 이익을 얻는지가 협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③은 '규범', '정체성', '이익의 형성'이라는 구성주의 어휘를 넣어 신자유제도주의와 섞어 놓은 함정이다. 제도가 중요하다는 말만 보고 신자유제도주의로 오인하면 틀리기 쉽다. 신자유제도주의의 제도는 협력의 조건을 바꾸는 장치이지, 국가 정체성과 이익 자체를 만들어 내는 규범구조로 보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제도, 협력, 정보 제공, 거래비용 감소, 절대이득이 나오면 신자유제도주의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규범, 정체성, 이익의 형성처럼 국가의 선호 자체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면 구성주의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신자유제도주의는 제도가 협력을 돕는 이론이고, 구성주의는 규범이 정체성과 이익을 만든다는 이론이다.

NoteBase

문 15. 정의의 전쟁(Just War)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 (jus ad bellu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당한 대의

②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③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

④ 최후의 수단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의의 전쟁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인 jus ad bellum과 전쟁 수행의 정의인 jus in bello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jus ad bellum은 전쟁을 시작하는 결정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키워드는 정당한 대의, 합법적 권위,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 최후의 수단이다.
jus in bello는 전쟁이 시작된 뒤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키워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비전투원 보호, 수단의 비례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당한 대의는 전쟁 개시를 정당화하는 대표 기준이므로 jus ad bellum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다.
이 구분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므로 jus in bello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전쟁 개시의 정의에는 정당한 대의,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 최후의 수단 등이 포함된다.
③ O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은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므로 jus ad bellum에 해당한다.
④ O
최후의 수단은 외교적 해결 등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된 뒤에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기준이므로 jus ad bellum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전쟁의 정당성과 전쟁 수행의 규범을 일부러 섞어 놓은 선지이다. 학생이 '정의의 전쟁'이라는 큰 틀만 기억하고 개시와 수행의 구분축을 놓치면 ②도 맞는 기준처럼 보이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 조건을 말하면 jus ad bellum으로 판단하고, 전쟁 중 누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말하면 jus in bello로 판단한다. 발문이 개시의 정의인지 수행의 정의인지 먼저 나누면 정답이 바로 갈린다.

암기 포인트

개시는 왜 싸우는가의 문제이고, 수행은 어떻게 싸우는가의 문제이다.

NoteBase

문 16.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가별 목표(기여방안)를 스스로 정하기로 하였다.

③ 한국은 유엔에 제출한 기여방안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④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C까지 제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파리협정이 모든 국가의 참여를 요구하면서도 책임까지 동일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 즉 보편적 참여와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체제이지만, 책임과 의무의 구조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
핵심 구분은 '모든 국가 참여'와 '모든 국가의 동일 책임'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별 기여방안은 각국이 자국 여건에 따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의 참여를 요구하지만, 형평성과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반영한다. 올바르게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되 선진국이 계속 선도적 역할을 하고, 개도국은 각국 사정에 따라 기여를 높여 간다'이다.
② O. 파리협정의 핵심 장치는 국가별 기여방안(NDC)이다. 각 당사국이 자국의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고, 이후 더 높은 수준으로 갱신해 간다는 점이 맞다.
③ O. 한국은 2015년 제출한 기여방안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현상 '유엔에 제출'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제출한 목표를 가리키므로 내용은 맞다.
④ O.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5°C 제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취지는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는 문장을 '모든 국가가 똑같은 책임을 진다'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처럼 일부 국가만 묶는 체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완전히 없앤 것도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후변화 협정 문제는 먼저 네 가지를 분리해서 본다.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지, 책임이 동일한지 차별화되는지, 목표를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하는지, 온도 목표가 2℃와 1.5℃ 중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나누어 보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파리협정은 '전원 참여, 책임은 차별화, 목표는 자발적 제출, 온도는 well below 2℃와 1.5℃ 노력'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7.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행위의 대상이 정부 단위에서 개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비국가 행위자로 확대되었다.

②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③ 강대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견국가나 약소국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④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외교의 대상, 필요성, 활용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외교는 한 국가가 외국 정부만이 아니라 외국 국민, 시민사회, 여론을 상대로 자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려는 외교 활동이다.
전통외교는 정부 대 정부의 공식 교섭이 중심이지만, 공공외교는 정부 대 국민, 사회 대 사회의 소통과 이미지 형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차이축은 외교 상대가 정부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해외 대중과 비국가 행위자까지 확장되는가에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외교의 대상이 정부에서 개인, 시민사회, 여론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공공외교의 핵심 특징에 부합한다. 공공외교는 비국가 행위자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이다.

② O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군사력만으로는 국제사회와 이슬람권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였다. 그 결과 해외 여론, 이미지, 가치 전달을 중시하는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

③ X
틀린 부분은 "강대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견국가나 약소국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공공외교는 강대국만의 전략이 아니라 중견국이나 약소국도 국제적 이미지, 문화, 규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교이다. 올바르게는 "공공외교는 강대국뿐 아니라 중견국가나 약소국에도 유용한 전략이다"가 된다.

④ 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확산은 해외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혔다. 이 때문에 국가 이미지 관리와 여론 설득을 중시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공공외교를 전통적인 힘의 크기와만 연결해 오답을 유도한다. 공공외교는 하드파워가 약한 국가도 문화, 가치, 평판,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견국가에 특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외교 문제가 나오면 먼저 외교 상대가 정부인지 해외 대중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상대가 외국 국민, 여론, 시민사회라면 공공외교의 성격이 강하며, 활용 주체도 강대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공외교는 정부가 아니라 대중을 향한 외교이며, 강대국 전용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외교이다.

NoteBase

문 18.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한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을 승인하였다.

② 오타와 협약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③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④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으로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의 주도 주체와 오타와 협약의 실제 가입 범위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은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연대하여 대인지뢰의 전면 금지를 요구한 초국가적 인도주의 캠페인이다.
오타와 협약은 그 성과로 성립한 대인지뢰 금지 조약이지만, 미국·러시아·한국처럼 안보 문제를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가들도 있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미국, 한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을 승인하였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미국, 러시아, 한국은 오타와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② O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은 오타와 협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압박과 여론 형성 역할을 하였다. 시민사회가 국가들을 움직여 조약 체결을 촉진한 대표 사례이다.

③ O
이 운동의 대표 조직인 ICBL은 여러 국제 비정부기구의 연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였다. 따라서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④ O
조디 윌리엄스는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을 이끈 공로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엄밀히는 ICBL과 공동 수상이지만, 조디 윌리엄스가 이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진술 자체는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협약이 국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요 강대국도 모두 가입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타와 협약은 상징성과 확산력은 컸지만 미국·러시아·한국 등 일부 국가는 끝내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규범 운동 문제는 먼저 운동의 주체가 국가인지 NGO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조약이 보편적 지지를 받았는지와 실제 당사국 범위가 일치하는지를 따져 보면 된다. 인도주의 규범이 강해도 주요 군사국이 비당사국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암기 포인트

대인지뢰금지운동은 NGO가 주도했고, 오타와 협약은 성과였지만 미국·러시아·한국은 비당사국이었다.

NoteBase

문 19. 민주평화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②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속성을 공유한다.

③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 야당의 존재 등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④ 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주평화론의 핵심 주장과 그 설명 논리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이론이다.
규범적 설명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타협, 협상, 상호 관용의 규범을 대외적으로도 적용한다고 본다.
제도적 설명은 견제와 균형, 권력 분산, 여론과 야당의 존재 때문에 지도자가 전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주평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선지는 민주주의 상호 간 평화를 그대로 서술한 내용이므로 옳다.

② O
이 선지는 민주평화론의 규범적 설명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내부 정치에서 타협과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을 학습하므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무력보다 협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③ O
이 선지는 민주평화론의 제도적 설명에 해당한다. 권력 분산, 견제와 균형, 야당과 의회의 존재는 전쟁 결정을 느리게 하고 공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도자의 일방적 무력 선택을 어렵게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표현이다. 민주평화론은 전쟁의 발생 가능성과 상대 선택이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전쟁 발생 가능성은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민주주의 국가 상호 간에는 전쟁 가능성이 낮다'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전쟁의 원인을 일반론으로 뭉뚱그려 정치체제 변수를 지워 버린 것이 함정이다. 민주평화론은 바로 그 정치체제, 특히 민주주의 여부가 전쟁 가능성에 차이를 만든다고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주평화론 문제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국가 상호 간 평화'라는 핵심 명제를 잡고, 그 근거가 규범적 설명인지 제도적 설명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정치체제가 전쟁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하면 민주평화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술이다.

암기 포인트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끼리 평화, 근거는 협상 규범과 제도적 견제이다.

NoteBase

문 20. 18세기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을 맺어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7년전쟁을 일으켰다.

②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인디언 전쟁에서 충돌했다.

③ 영국의 미주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해 미국 독립운동이 촉발되었다.

④ 미국은 프랑스와의 동맹으로 영국군을 물리치고 1783년 파리 조약에서 독립을 승인받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8세기 국제관계에서 7년전쟁, 프렌치-인디언 전쟁, 미국독립전쟁의 동맹 구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7년전쟁은 영국-프로이센과 프랑스-오스트리아-러시아가 맞선 세계적 세력균형 전쟁이다.
프렌치-인디언 전쟁은 북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쟁 전쟁으로 7년전쟁의 일부 전장이다.
미국독립전쟁은 영국의 식민지 통치와 과세에 반발한 13개 식민지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독립한 전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을 맺었다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
실제로는 영국은 프로이센과 손잡았고,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러시아와 연합하여 7년전쟁을 치렀다.

② O
프렌치-인디언 전쟁은 북아메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패권을 두고 충돌한 전쟁이므로 옳다.

③ O
7년전쟁 이후 영국은 전쟁 비용을 메우기 위해 미주 식민지에 각종 세금을 부과했고, 이런 조치가 미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므로 옳다.

④ O
미국은 프랑스의 군사·재정 지원을 받아 영국과 싸웠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을 승인받았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은 미국독립전쟁기의 미불 동맹을 7년전쟁의 영불 관계에 잘못 겹쳐 놓은 선지이다. 18세기 후반에 프랑스가 미국을 도운 사실은 맞지만, 7년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적대하였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8세기 영미프 관계 문제는 전쟁별 동맹 구도를 먼저 나누어 판단하면 풀린다. 7년전쟁은 영국 대 프랑스의 대결 구도이고, 미국독립전쟁은 미국-프랑스 대 영국의 구도라는 점을 기준으로 선지를 읽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영-프는 7년전쟁에서 적이고, 미-프는 미국독립전쟁에서 동맹이다.

NoteBase